

# 은행과 손잡은 이통사, 블록체인으로 개인신원 증명

SKT 독일 도이체텔레콤과 MOU  
KT 기기체인 공개, 기가스텔스 선봬  
LGU+ 소프트뱅크·파이스톤과 MOU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이 동통신 3사가 '미래 먹거리' 발판을 위한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 뛰어들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사와 협력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에 고삐를 쥐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KEB하나은행·우리은행·코스콤과 손잡고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했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SK·LG·KT 그룹사의 신입·경력 채용 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개인이 신원 정보와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서비스와 다르다. 기존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한 개인



이동통신 3사 KT 미래플랫폼사업부부장 사장이 5G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KT

정보와 통제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고 투명한 신원증명이 가능하고, '데이터 자기주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3개사는 ICT 기업과 금융 기업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를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오랜 기간 가장 보안성이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통신3사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경험과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분야의 풍부한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한준성 부행장, 우리은행 디지털금융그룹장 황원철 상무, 코스콤 미래성장본부 김계영 본부장, SK텔레콤 블록체인/인증Unit장 오세현 전무, LG유플러스 FC부문장 이상민 전무, KT 블록체인비즈니스센터장 서영일 상무, 삼성전자 서비스기획그룹장 김주완 상무(왼쪽부터) 등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7개 참여사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SK텔레콤

노하우를 바탕으로 '녹스(Knox)' 기반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신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생체인증과 함께 앞으로의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통합 온라인, 전자계약 위·변조 방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해 글로벌 사업자와 협업하거나 자체 솔루션을 내놓는 등 블록체인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각 사별로 SK텔레콤은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19'에서도 이치텔레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 사업에 뛰어들 바 있다. 국경이 없는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겠다는 밑그림이다. 양사는 모바일 블록체인 신분증이 상용화, 활성화되면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여행객들이 간편한 신원 확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T는 상용화 서비스를 출시하며, 실증 사례를 도출하고 있다. KT는 지난 4월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기체인'을 공개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를 선보인 바 있다.

기가스텔스는 신원이 검증된 송신자

에게만 IoT 단말의 IP 주소가 보이는 기술이다. KT 기기체인을 통해 고유 ID를 저장하고, 1회용 상호인증 접속토큰을 발행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보안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에코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도 글로벌 사업자들과 손잡고 해외결제 서비스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일본의 소프트뱅크, 대만 파이스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결제 시스템 C CP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CCPS는 통신사간 결제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한 서비스로, 각 통신사가 입자는 한국·일본·대만 등 해외를 방문했을 때 해당 통신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해외결제가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근원적 한계를 극복해 차세대 신뢰 인터넷을 제공할 혁신적 기술"이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상용화하면 통신사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단순 전송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서비스 사이에서 가치를 교환하는 사업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홍민영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서울 초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인 14일 오전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 금리인하 임박... 18일 금통위 주목

기준금리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는 3분기 중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 이달 말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줄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경제여건, 0%대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성장률 등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7월이나, 8월이나 등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한은의 결단만이 남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올린

뒤 8개월째 동결해 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로 수출이 7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까지 겹치며 금리 인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10일 "글로벌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기대감은 높아졌다.

한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때가 아니다"며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 그런 그가 "대의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며 지난달부터 입장이 바뀌었다. /김희주 기자 hj89@

## 전문가 94% "日 수출제재, 韓기업 피해크다"

전경련, 日 전문가 50명 긴급설문

70% "수출제재 장기화 될 것"  
대응 방법 48% '외교적 대화'

일본 전문가 대부분이 일본 수출제재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일본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수출 제재에 대한 한국 기업 피해에 대해 54%는 '매우 높다', 40%는 '약간 높다'고 응답했다. 90% 이상이 피해가 크다고 대답한 셈이다.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대답도 62%에 달했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수출 제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70%나 됐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 조치라고 보고 있지만, 이후에도 제재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도.

전경련 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미드 3개 외에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제재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들이 많으므로 이번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는 외교적 대화가 48%로 가장 많았다.

부품과 소재 국산화도 30% 지지를 받았다. WTO 제소와 2차 보복 대비는 6%에 머물렀다. 부품과 소재 국산화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중론인 만큼, 외교적 대화가 가장 현실적인 조치인 셈이다.

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일본경제계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본경단련과의 경제협력 채널인 '한일경제회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

## 日, 수출규제 전 對韓 무역 이미 축소

한국으로 가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이 지난 몇 년간 한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대(對) 한국 수출입을 모두 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농업 분야에도 수입규제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달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양국 산업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2018년 한국산

수산화칼륨과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결정했다.

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가 2002년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한 액체 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 진형상액, 액체비누,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덤핑 조사 전인 2014년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로 절대적이었다.

산업·외교부, '2018 무역장벽 보고서' 5년간 韓제품 50%에 '반덤핑 관세'

하지만 2015년 2월 일본 업체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해 같은 해 5월 조사가 시작됐고 2016년 8월 9일 한국산 제품에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다.

공장이나 플랜트 시설의 액체와 기체를 운송하는 배관을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3월 개시했다.

일본기업 3곳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돼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